

## 원산지 거짓표시 수산물 3건 중 1건 ‘일본산’

전체 미표시·거짓표시 중 ‘일본산’ 각각 39%, 29%

수산물, 돔·가리비조개·방어·어류가공품·가오리 순

국내 유통 수산물 중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3건 중 1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원산지 미표시, 거

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0%가 ‘일본산’ 수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미표시의 39.3%, 거짓표시의 29.4%가 일본산 수산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수입된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적발 비중 중 ‘일본산’ 비율은 35.0%로 2014년(11.8%)에 비해 3배 증가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돔, 가리비조개, 방어, 어류가공품, 가오리

순이었다.

지난해 판매처별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노점상(68.8%) 다음으로 통신판매업(83.5%)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 수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용일기자**

귀성 28일·귀경 30일  
 가장 혼잡...‘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일까지

정부가 올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증편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올 추석(9.29)과 임시공휴일(10.2), 개천절(10.3)로 인한 7일간의 연휴가 발생함에 따라 약 4022만 명(전년대비 27% 증가)이 전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이동객은 575만 명이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일 평균 대수는 531만대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 추석연휴인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시행되는 통행료 면제는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귀성과 귀경차량이 고속도로에 몰리는 기간은 각각 오는 28일 오전과 30일 오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승용차가 전체 92%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추석연휴 나흘간 대중교통(버스, 철도, 항공, 해운)의 운영을 1만430회(좌석 78만2000석) 확대 운영한다.

우선 고속버스 운행회수를 8442회(15만2000석) 늘려 운행한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같이 전체 10만7806회 운행되며 수요가 급증할 경우 예비 차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철도 운행도 5680회에서 5904회로 224회 증가해 15만2000석의 공급좌석을 확대한다.

국내공항도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를 포함 총 1255회(26만9000석)의 운항회수를 늘리며, 해운의 운항회수도 509회를 증회해 20만9000석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추석 사랑의 송편 나눔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5일 부산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에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부산적십자사는 송편 6000개를 빚어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 국가인권위 “광주 고교생 조기등교·야간학습 인권 침해 아니다”

교육단체, 행정심판 고려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조기등교·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인권 침해가 아니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교육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가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강제 조기 등교, 방과후학교, 야간 자율학습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인권위는 “시교육청이 ‘강제 조기 등교·방과

후학교·야간 자율학습 금지 내용’이 담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운영 지침’을 폐지해 15개 인문계 고교가 학생들을 일찍등교 시킨 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시켜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교육단체의 주장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지침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방과후 학습·자율학습’을 지양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고 실태 조사에서도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낮았다”고 기각 사

유를 제시했다.

또 “학생들이 30~40분 일찍 등교와 자율학습은 학교의 강요가 아닌 학생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돼 인권침해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 교육단체는 “인권위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어 관련 단체들과 논의해 행정심판을 청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광주 사이버금융 범죄 64%  
 ‘문자·메신저 악용 피싱’  
 취약한 고령층 대상 예방 홍보

광주 지역 사이버 금융 범죄 10건 중 6건 이상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피싱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시민사회,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피싱 범죄에 취약한 고령층 대상 예방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다.

25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간 광주에서 발생한 사이버 금융 범죄 572건 중 64.3%에 해당하는 368건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앱을 이용한 수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늘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상생활 속 온라인 기기 활용 폭이 넓어진 만큼, 사이버 범죄가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명절 연휴에는 선물 택배와 명절 인사를 가장한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경찰은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사이버 범죄 예방 강화를 펼치고 있다.

우선 시민들을 ‘누리 캡스’ 명에 경찰로 위촉, 사이버 공간 내 불법 유해 정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 SK텔레콤 과도 ‘사이버 범죄 예방·정보통신 기술 교류’ 협약을 맺고 협업키로 했다.

또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고령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예방 홍보에 나섰다.

최근에는 SK텔레콤, 누리캡스와 함께 광주 광산구 월곡 시장 일대에서 피싱 사기 등 범죄 예방 홍보활동도 펼쳤다.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점검 서비스도 지원 받아, 시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내 보안 점검도 진행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 중 선물 택배 배송, 안부 인사를 가장한 메신저 피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 또는 금융기관은 개인 고위 정보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등은 삭제·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